

1. 기술자료

국내 폐지의 수급 안정화 방안 연구 [최종회]



본 연구는 폐자원들 중 폐지와 관련한 연구로, 폐지 수급상의 불균형 문제와 폐지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관련 산업내 제지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나빠짐에 따라,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의 의뢰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지 재활용과 관련한 문제점,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 등을 제언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국산 폐지와 수입 폐지 가격의 급등세로 인해 폐지 관련 제지업계의 경영상의 예측을 불허케하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국내 제지업계의 애로뿐 아니라, 폐지 가격의 급등은 최종 제품인 포장재 및 신문 등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생활 물가상승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적으로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연구책임 이정섭 연구의원
외부연구 박근수 박사 (서울시립대연구소)
연구보조 민경옥 연구의원

5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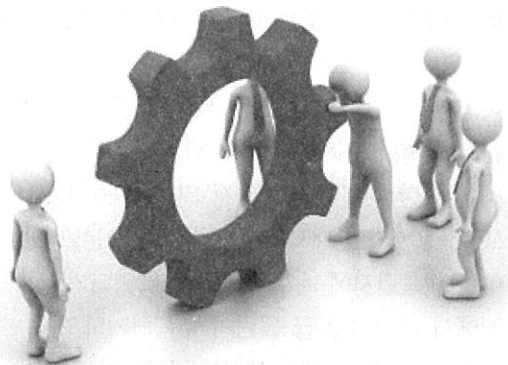
1. 폐지 유통구조의 단순화 및 회수 시스템의 개선

우리나라의 폐지수거 체계는 배출원→수집자→고물상→중간상인→압축장→제지업체 등의 복잡한 5단계 유통과정을 통하여 높은 거래비용을 초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폐지수거 체계가 1~2단계로 단순화 뿐만 아니라 최초의 수거과정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초 수거과정이 대부분 유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단계의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높은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폐지의 다단계 유통 과정에 따른 폐지 원자재가의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폐지를 포함하여 폐기물 관련 유통구조는 현재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중간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폐지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 산업정책과 폐자원의 재활용 관련 산업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갖는바, 정부(지자체) 차원의 직접적인 폐자원 수집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폐자원을 다루는 다단계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폐자원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의 폐지 수집은 원활한 반면에, 일부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는 폐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처럼 도시 내에 회수거점을 지정, 분리회수용기를 설치하거나 농촌 지역의 부녀회, 노인회 등과 연계한 지자체 또는 위탁사업자의 일괄 회수체계 도입 및 현대화 등으로 전반적인 회수시스템의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폐자원 회수 시스템의 일원화와 관련한 국내 성공사례로서 용인시 재활용센터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용인시는 재활용센터를 통해 폐자원들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용인시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폐자원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2. 폐지 수급관리위원회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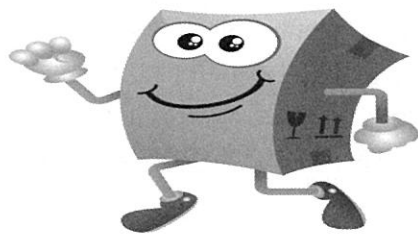
본 연구의 심층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지업계(대기업, 중소기업)는 최근 3년간 폐지 확보 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응답(77.8%)하여 폐지 확보시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제지기업들이 폐지 확보에서 수월치 않았음을 입증한 사례로, 제지기업들은 향후 2-3년 후에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폐지 확보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77.8%)도 높아 제지기업들의 경영상의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폐지 수급상의 문제와 폐지 가격 등이 폭등할 경우에 이를 조정·관리하기 위한 정부(지경부) 내에 '폐지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위원회에서는 급격한 폐지 가격의 상승 및 공급차질 발생의 우려 시 탄력적·한시적으로 폐지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출쿼터제, 수출신고제 등의 시행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들 중 대만은 자국내 폐지 및 산업용지의 가격안정과 자국내 산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폐지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세계 폐지수요의 감소 및 가격상승 요인이 사라지자 폐지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탄력적·한시적으로 폐지 수급 상황을 조절하고 있음을 해외사례 분석에서 이해해 볼 수 있었다.

3. 폐지 비축단지의 조성

폐지를 사용하는 제지기업들에게 폐지는 주원료로 사용됨에 따라, 소량이 부족해도 폐지 관련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게 형성되기도 하며, 국내외 경기상황 및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일시적인 공급과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기적으로, 제지기업들은 국내 폐지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상의 애로가 많음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시 일정 물량의 폐지를 비축하여 제지기업들의 폐지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비축해 놓은 폐지를 시장에 공급하는 폐지의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폐지 비축단지의 조성 및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폐지 비축단지 조성 및 건설은 폐지의 비상 수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폐지수급의 원활화와 폐지 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폐지 비축단지는 폐지의 가격이 싸고 폐지의 공급물량이 충분할 때에는 비축단지에 폐지를 저장해 놓았다가, 시장에서 폐지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거나 가격 상승 시 비축단지에서 폐지를 공급하여 폐지



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혹은 지자체)는 수도권 등에 폐지 비축단지를 건설하여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여 폐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폐지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한국에서는 폐지 수급의 불균형시 폐지에 불법 가수행위와 부당 감량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폐지업체와 제지업체간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 사례 중 일본은 폐지의 표준품질규격 제정, 비가림 시설, 철저한 선별 및 상품명세(상표) 부착 등의 폐지 품질보증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고, 미국도 독립적인 선별시설에서 철저히 품질 좋은 폐지를 선별하여 공급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간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폐지업체와 제지업체간 거래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폐지의 품질인증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폐지에 대해 검증 후 등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즉, 폐지의 품질별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 KS규격개선 등 등급별 구매가격의 차등화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며, 제지업체에게는 품질인증을 받은 폐지를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도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전국 규모의 “(가칭)폐지유통공동법인”의 설립 추진

국내에서 회수되는 폐지는 연간 800여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폐지 수급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일본은 ‘고지재생촉진센터’, 영국의 ‘WRAP’ 과 같은 정부(혹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관 공동의 폐지 관련 전담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규모로 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폐지 수집에서 판매까지 총체적인 폐지 유통의 일원화와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우수 폐지 공급·유통 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진국 중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폐지공급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채무보증기금으로 고지촉진센터에 2.8억엔을 출연하여 폐지의 품질제고 및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폐지 유통 및 공급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폐지 등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과 개선

등의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폐지 공급업체의 시설현대화와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폐지 공급업체의 현대화 지원과 함께, 기존 폐지 압축업체(압축시설 등을 구비한 수집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우수공급업체를 선발하여 “우수 폐지유통 전문기업” 인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정된 인증업체들에 대해서는 폐지의 납품가격 우대, 시설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폐기물 에너지화 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폐합성수지류와 같은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처리해야 하나 이 경우에도 온실가스 발생은 불가피하나 제지업체에서는 이를 에너지화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승인 및 변경 신고 또는 승인시 환경성조사서 제출 등의 까다로운 규정 완화 등 폐기물에너지화 촉진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소각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설치시의 Input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끝-



2010년 5·6월호부터 연재하였던 ‘국내 폐지의 수급 안정화 방안 연구’가 2013년 1·2월호 연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골판지포장물류지는 국내외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골판지포장산업과 관련된 최신 기술을 선별하여 ‘기술자료’ 코너를 통해 계속 연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독 부탁드립니다.

